

중기협동조합중앙회, 중기중앙회로 명칭변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8월 8일 중앙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의결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8월 중에 정관개정 등 규정을 마무리한 뒤 9월초 '신이 및 제2창립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회원구조를 지방단위의 지방조합, 사업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관련단체까지 확대해 전 중소기업 업종을 대표하는 개방형 체제로 바꿨다. 또,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이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한 경우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합들의 중앙회장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회원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 부회장의 수를 현행 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중앙회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근로자 난치병 자녀 지원

기업은행은 희귀난치성질환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 11명에게 치료비 6790만원을 무상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치료비 지원은 지난 3월 기업은행이 4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은복지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난치성질환이나 소아암, 심장병, 각막이상, 척추장애 등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중소기업근로자로, 선정 시 연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실상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벤처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서울특별시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에서부터 경영전략 단계까지 상세히 교육하는 '벤처창업스쿨'을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기간은 9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3개월간이다. 접수 신청 마감은 다음달 9월 7일까지며, 홈페이지(<http://school.sba.seoul.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하면 된다. (02)2657-5703~4.

산자부, 15개 국가전략기술 선정

정부가 차세대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섬유 등 1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집중 투자한다. 15개 전략기술은 2008년 종료되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이어 '차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15개 전략기술은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섬유, 일반기계, 스마트철강소재 등 5개 주력산업과 △나노 가공장비, 생물바이오, 신기술융합,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미래유망산업 △청정기술, 차세대의료기술, 마이크로생산시스템, 지식서비스, 지능형물류 등 삶의 질 및 파급효과 산업으로 나뉜다.

산자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인력양성, 특허, 표준화 등에 관한 '패키지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핵심·원천기술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번 R&D시스템 개편은 승자독식의 기술경쟁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R&D투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대형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으로 차차세대 먹거리 창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일자리 만든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최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를 최장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올해 생산라인 증설이나 사업 확대로 상시 고용 근로자를 지난해보다 10% 이상(최소 10명)늘렸거나, 채용 계획을 세운 중소기업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된다. 기본 유예 기간은 2년이며, 지방 소재 기업은 1년을 추가해 3년까지 유예해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올해 창업한 기업은 고용 인원 증가율과 최소 인원 등을 따지지 않고 2009년까지 3년간 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2011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약(新藥) 등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기업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기 환급 등의 혜택들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실제 고용 실적을 내년에 확인해 유예기준에 미달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취소키로 했으며, 유예기간 중이라도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예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근로자 세금우대저축 계속 비과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 가운데 농어민,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융 절세상품이 대부분 폐지될 경우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때문이다.

당정은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중소기업·농어민·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님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한국조세연구원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던 근로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증여세 면제, 각종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도 연장키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설비투자 분야의 조세감면은 당분간 유지하는게 좋겠다”면서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기 임직원 대상, 무료 직무교육 과정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고 중앙일보ITEA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교육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모든 과정이 전액 무료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교육 참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여 인건비도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전략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한 A사의 이현철팀장은 “사내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던 차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강의 내용이 충실해 향후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D네트워크사에서 통신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영 대리는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프로세일즈맨의 성공전략' 과정에 참가한 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중소기업 직원에게 앞으로 이런 교육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7월말 현재 아가방, 배상면주가, 동국제약, 한국데이터하우스 등 다양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참가해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호텔, 기계, 건설, 금속, 연구소, IT 분야 등 다양한 업종 근로자들이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노동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올해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대구경북중기청,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9월말까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를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공동 판로개척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심사를 거쳐 소요비용의 70%(상표당 5천만원 한도)까지 상표개발비를 지원한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올스트, 이크에크, 궁중삼우 등 3개 공동상표가 등록돼 있으며, 24개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053)659-2218.

부산지역 어음부도율·부도금액 크게 하락

부산지역 어음부도율과 부도금액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난달 어음부도율은 전월 당좌거래가 정지된 업체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600억원 상당 특이부도를 제외할 경우 0.32%로써 전월 1.22%에 비해 하락했으며 부도금액도 167억원으로 전월 754억원보다 587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어음교환금액은 5조1510억원으로 전월 6조1859억원보다 1조349억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업체의 부도현황으로는 도·소매업이 66억원으로 전체 부도금액의 39.2%를 차지했으며 건설업 45억원 26.8%, 제조업 26억원 15.3% 순으로 집계됐다.

또 부도업체수는 전월 20개보다 2개 감소한 18개를 기록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법인)이 8개, 개인사업체가 10개로 조사됐다.

서울시, 하반기 중소기업에 총 3228억 융자 지원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228억원을 중소기업에 융자키로 했다. 융도별로는 경영안정자금이 1913억원, 시설자금이 1315억원이다.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239억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989억원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는 연리 4.0~4.5%다. 경영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 3~5년 거치 5~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은행 금리의 1.5~2.5%를 시가보전해주며, 1년 거치 3~4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담보가 없는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하반기 1922억원 규모)을 제공한다. 융자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및 7개 출장소에서 모두 받는다.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를 참조하면 된다.

중소중앙회, 콜금리 인상 “큰 실망”

중소기업중앙회는 콜금리 인상 결정에 큰 실망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4.25%에서 4.50%로 기습 인상한 것에 대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둔화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큰 실망”이라고 전했다.

중앙회는 “각종 실물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으로 촉발될 원화강세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 움직임도 우려했다. 또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비투자형 기업과 창업기업은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창업 감소도 걱정했다.

중소기업 경영·정보컨설팅 지원

경기 안산시시는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정보 분야의 기업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총 7억원을 관내 중·소제조 기업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희망 기업에 분야별 컨설턴트를 배정 후 진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 고용 창출과 소비촉진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15개 희망기업에 분야별로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총 30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008년부터 정보화 컨설팅 분야의 지원을 확대, 2010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35개 이상 기업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영일반·인사·재무·마케팅·생산관리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보화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그동안 시가 전액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이 5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중기협동조합연합회 출범

광주전남지역 각종 중소기업조합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연합회를 출범시켰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조합 이사장 22명은 8월 9일 광주 센트럴관광호텔에 모여 창립식을 갖고 장춘상(60)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들 조합은 가구, 인쇄, 레미콘, 아스콘, 농약판매, 광고, 의료판매, 재래시장, 슈퍼마켓, 식품, 기계 등의 업종 종사자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으나 개별적인 활동을 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회원 친목단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22개사 선정

대전지역 22개 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한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정착도, 성장가능성, 재무상태, 기술성 등 17개 항목에 대한 사전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22개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9월 4일 유망중소기업 인증서를 받게 되며 향후 5년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박람회 우선 참가 혜택 등이 부여된다.

또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선정 우대,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기업홍보, 대전시 주요행사 초청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243개 업체를 선정,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된 업체, 부도, 타 시도 이전 업체를 제외한 112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 관리해 오고 있다.

강릉지역 우수중소 적극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중소기업은행 및 강릉시와 강릉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은행은 강릉 과학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우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과 금융·재무·기업진단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중소기업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 강릉시는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 소재 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과 관련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은행 기업대출 증가 크게 둔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1조9771억원으로 올해들어 월간 실적으로는 최저 규모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5466억원이 감소해 6개월째 대출 증가액보다 대출 상환액이 많은 마이너스 현상을 이어갔고 중소기업 대출증가액은 2조 5236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7월중 2조5032억원이 증가해 올해 1월의 4천 882억원 감소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은 301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역시 연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중기협' 위탁 논란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 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연수생 추천단체에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공공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라"고 주장해 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마저 연수생제도처럼 인권유린 제도로 전락시킬 셈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도입 및 사후관리 업무를 기존 연수생 추천단체와 공동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부처와 이권단체 간 나눠 먹기 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13년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들의 송출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업주들의 입을 빌려 고용허가제 입법청원을 8년이나 무산시킨 장본인 또한 중기협"이라며 "투명한 외국인력제도 도입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이권단체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올 하반기 18조원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과 시설투자 촉진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총 17조 8천억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기관별 지원규모는 신보가 일반기업 및 수출·창업 기업 등에 12.3조원,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4.4조원, 지역재단은 영세소상공인 등에 1.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존 보증이외에 추가로 최고 2억원(시설자금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신보의 보증공급 12.3조원 중 혁신형 창업기업, 수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등에 1.8조원(15%), 기보는 4.4조원 중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에 2.5조원(57%)을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통산업대전 10월 개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2006 대한민국 유통산업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대형유통업체들과의 직접 상담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대전 참가등록은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http://www.sbdc.co.kr>)에서 할 수 있다.

중소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하고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2006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GPshow2006)'가 9월 14~16일 서울무역전시시장(SETEC)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250여 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의 첨단제품과 웰빙생활용품, 각 지역 특산품 등을 300개 부스에 전시하게 된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구매력 있는 해외 구매자 500여명 이상이 초청돼 국내 우수 중소기업체와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일대일 맞춤상담을 벌이게 된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100명 이상의 상품기획자를 파견, 품목별로 상담을 벌이며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간담회도 열린다.

기술보증기금, 지역전략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은 광역 시·도별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심사방법 적용 우대, 보증요율 최고 0.2% 감면, 영업점 무방문 제도 등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제도로는 보증금액 6억원 이하까지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A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영업점 무방문 시스템을 시행키로 했다. 보증 우대 지원은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기업은 0.2%, BB등급 이하 기업은 0.1% 보증료 감면 혜택 등이다.

중기 정보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적자원관리(ERP), 판매시점관리(POS) 등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정보화를 통해 일어난 생산성 향상효과를 측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활동을 제시한다.

컨설팅 수행범위는 △업무시스템, 업무운영 및 경영체질 평가 △IT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매출향상 등의 생산성 산출 △시스템·업무개선·프로세스 개선항목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컨설팅 대상기업은 ERP, POS, 생산시점관리(POP), 생산관리시스템(MES)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석유, 화학, 섬유, 식음료, 목재, 비금속, 건설, 도소매, 서비스 업종에 속한 기업이다. 컨설팅은 8월말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전산원 홈페이지(www.nca.or.kr)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